

FOCUS

- 기능성 몰탈 사용증가 -

건강 제품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기능성 몰탈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건강 기능성 몰탈이 속속 상품화된 이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수요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기능성 몰탈은 주로 맥반석이나 황토등을 주성분으로 개발돼 출시되고 있는데 한일시멘트공업(주)의 바이오레미탈과 고려바이오스톤의 세라몰 등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맥반석이 몸에 좋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데다 향균 및 탈취, 습도조절 기능등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파트의 상품성과 분양률 제고를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기능성 몰탈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맥반석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바이오는 맥반석과 함께 황토성분을 섞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등 제품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고려바이오측은 지금까지 삼성과 대우등 총 2만5천여가구의 아파트에 제품을 공급, 4만톤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일시멘

트도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2만여톤을 출하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바이오 관계자는 판매중인 몰탈이 인체에 유익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삼성건설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 축열효과가 뛰어난 온돌방식의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시스템에서 적합한 장점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형 건설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만큼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건설자재시장의 판도 변화 -

외국자본이 국내 전자재업계에 밀려오면서 시멘트 등 기초자재 시장의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양회 지분의 절반을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차지한데 이어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 라파즈가 동양메이저에 25%의 지분을 참여키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멘트업계에 외국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라파즈의 경우 이미 국내 시장점유율 12%인 한라시멘트를 인수한 상태에서 동양메이저에 지분참여를 결정,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한보철강 역시 외국자본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조만간 외국자본의

새주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와 철강은 업계의 특성이 다른 만큼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가격이나 수급관계에서 상이한 측면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멘트업계의 경우 지난해 1월 한라시멘트와 라파즈가 결합,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첫 출범한 이후 지난해말 다시 업계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쌍용양회가 일본 태평양시멘트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다.

이어 라파즈가 최근들어 다시 동양시멘트에도 1억달러의 지분으로 참여키로 함에따라 국내 시멘트시장은 외국계 회사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외국계의 입김이 시멘트 내수시장에서 절대적인 힘을 얻게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여러가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국내업체들이 힘들어 가꾸온 결과물이 경기 침체를 맞으며 혈값에 팔려나갔다는 자조섞인 반응과 함께 외국계 업체들의 선진적인 경영 기법들이 유입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우리나라는 연간 시멘트 수요가 5천만톤 정도로 프랑스보다 2배이상, 영국보다 3배이상의 시멘트소비를 보이고 있어 유럽업체들이 관심을 보일만한 시장이라며 라파즈와 태평양시멘트 등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이같은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이같이 외국업체가 진출함으로써 국내 시멘트시장에는 품질제고 효과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관련업계는 시멘트 수요층인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가장 관심을 두고있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까지 시멘트 시장은 판매자가우위를 점

하는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체계가 변화하거나 수급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지적들이 많다.

- 공장설립 가능지역 고시 -

산업자원부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립, 건축허가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일괄의제처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창업사업 계획승인 기간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내에 물류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사업(ISO 14000)을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8월중 대한상의등 민간단체들과 실시한 기업규제실태조사서 총 51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이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7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산자부는 검토과제중 65건은 수용 또는 검토등 긍정적으로 조치키로 했으며 13건만 미결 및 수용곤란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수용결정된 65건의 조치사항을 보면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장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입주요건을 완화해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키로 했다.

또 공장유형별로 표준공장제도를 도입, 기업의 공장설계 비용 및 기간단축을 도모하고 매년초 지자체별 공장설립가능지역 고시를 의무화해 별도의 입지기준 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공장설립 및 허가에 따른 소요기간을 현행 평균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 및 물류시설 지원확대차원에서 자연녹지내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대상에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을 추가하고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 사업에 44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사업을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고 우수 환경 친화적 제품 및 자원재활용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검토과제중 창업사업승인기간 단축, 환경친화제품 우선 구매제도도입등 12개 입법사항의 경우 늦어도 2002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요건 완화등 23개 과제는 2001년말까지, 나머지 25개 과제는 2002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경기 회복 조짐 -

건설경기선행 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지난 10월에도 두 자릿수가 늘어나는 등 6개월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과 공업용 건물 등의 실적이 늘어나며 921만6천㎡를 기록, 작년 동월(716만1천㎡)보다 28.7%가 증가했다.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5월을 고비로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6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477만2천㎡로 작년동월(401만1천㎡)보다 19%가 늘었으며 지난 9월에 88.1%의 증가율을 보인 상업용은 263만8천㎡로 75.7%가 늘어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또 공업용은 920㎡로 19.4%가 늘어 증가세로 반전됐으며 문교·사회용도 55.4%가 늘어난 56만6천㎡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설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185개 건설관련 기술서비스업체들의 생산활동(부가

가치 기준)은 9.6%가 줄어 올들어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관련 기술서비스업체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된 것은 전반적인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분기초기에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지난 10월의 경우 추석이 들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보이고 공공부문에서도 추경사업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11월중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업은 부동산중개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7.5%가 증가해 지난달에 이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이어갔다.

- 건설기술자 교육 미이수자 제재 -

앞으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와 해당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등 교육훈련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 12월 4일 건설기술자의 능력향상과 이를 통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교육훈련제도의 지속적인 변화로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었으나 2002년부터는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교육훈련 미이수자와 교육훈련경비 미부담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처리지침을 포함하는 제재사무처리지침을 개정, 처분기관인 각 시·도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시달했다.

또한 처분기관에 위반혐의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한국기술인협회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에도 통보, 내년부터는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촉구통보절차를 거쳐 제재처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설 관련업체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가 된후 3년 이내에 건설기술자가 알아야 할 각종 제도에 관한 소양교육인 기본교육(2주)과 해당 전문 기술교육인 전문교육(1주)등 총 3주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기간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처분과 함께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교육훈련제도가 현행 3년내 이수하는 교육외에 기술자의 상위 기술자격 및 학력취득과 경력누적에 따른 기술등급 상향시 해당 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토록 변경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골재 채취허가 지연에 따른 골재파동 -

골재채취 허가지연으로 채취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와 골재업계등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전국에서 채취된 골재는 총 1억430만1천m³로 비허가 공급량을 포함한 공급계획량 1억7천596만7천m³의 59.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허가공급계획량 1억5천113만1천m³ 가운데 허가량은 59.5%에 그친 9천3만4천m³에 불과하고 이중 96.3%인 8천672만7천m³가 채취된 것으로 집계돼 허가지연으로 채취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재원별로는 하천골재 채취량이 1천865만8천m³로 비허가 공급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계획량 4천356만1천m³의 42.8%에 그쳤으며 육상골재는 전체공급계획량 1천204만2천m³중 41.8%인 504만2천m³가 채취됐다.

하천골재 허가공급계획량 3천77만7천m³중 허가량은 46.4%인 1천429만4천m³에 그쳤으며 육상골재는 허가공급계획량 1천155만7천m³ 가운데 허가량이 57.2%인 661만3천m³에 달했다.

또 바다골재는 전체 공급계획량 4천445만6천m³의 52.3%인 2천326만m³가 채취됐으며 산림골재는 7천590만8천m³의 57.7%인 4천382만4천m³가 채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골재 허가공급계획량은 4천441만9천m³로 허가량이 59.1%인 2천626만1천m³, 산림골재는 허가계획량 6천437만8천m³중 허가량이 66.6%인 4천286만6천m³이었다.

하천골재의 채취허가실적이 46.4%로 전체 허가실적 59.5%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제 도입등 환경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골재업계는 환경규제등 골재채취관련 각종 규제의 강화로 각 시·군의 허가가 지연되면서 채취실적이 부진, 최근의 골재수급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시멘트사 거래상황 악화 -

일본의 주요 시멘트 5사의 2001년 9월 중간 결산을 발표하였다. 국내 판매량 감소나 거래 상황의 감소, 석탄 가격의 앙등등으로 시멘트 사업의 손익은 대폭적으로 악화. 관계 회사의 업적 부진도 올리고 태평양 시멘트가 92억엔의 최종 적자로 된 외, 주우 대판 시멘트

도 경상 이익이 49%감소했다. 우부흥산도 시멘트 사업이 부진하고, 단독의 건설 자재 사업의 손익도 크게 떨어졌다. 국내 수요의 신장이

기대할 수 없는 속에서, 각사 모두 생산 체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급선무로 되어 있다.

